

## 2. 제 6 차 APEC 정상회담의 의의와 시사점

- (제 6차 APEC 정상회담의 의의) 11월 17-18일간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은 아시아 위기 해결을 위해 주요국들이 상호 의견 조정을 통해 위기 해결에 실마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회의였음
- (주요 논의 의제) APEC의 21개 회원국들이 그동안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올해 정상회의 의제는 무역·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(TILF), 경제·기술협력, 금융안정, 전자상거래 및 Y2K(2000년)문제, APEC의 향후 진로 등이 논의됨
- (시사점) 자유무역 조기 실시와 헤지펀드 규제 등에 대한 의견 조율에는 실패했으나,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과 역내 금융위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판단됨

### □ 제 6차 APEC 정상 회담의 의의

- 11월 17-18일 양일간 개최된 제 6 차 아-태경제협력체(APEC) 회의는 아시아 위기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.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간 의견 조율을 통해 위기 해결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었음
- 97년이래 태국, 인도네시아, 한국은 물론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금융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APEC은 예측은 물론 아무런 사후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방관하였음
- 이에 따라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APEC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임
- 한편, 이번 회의의 중점 주제인 아시아 경제위기 해법을 둘러싸고 신속한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미국, 캐나다와 당분간 보호무역주의를 고집하는 일본,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이견 대립이 있었음

### □ 주요 의제

- 올해 정상회의 의제는 무역·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(TILF), 경제·기술협력, 금융안정, 전자상거래 및 Y2K(2000년)문제, APEC의 향후 진로 등임

- (무역·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문제)

- 회원국들은 97년 밴쿠버 정상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그동안 조기자유화 15개 분야 중 에너지·수산물·임산물·의료장비·화학·보석 등 9개 분야를 우선추진 분야로 선정하여, 가능하면 99년부터 자유화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음
- 그러나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해 무역·투자 자유화에 대한 회원국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분야별 조기 자유화의 타결은 무산되었음

- (역내 금융 위기 안정)

- 올해 처음 의제로 추가된 금융안정 문제는 회원국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임
- 회원국들은 사전 실무회담을 통해 일단 국제금융시장에 규율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각국 재무부의 차관보급이 참가하는 재무 고위관리 회의를 상설화하기로 합의함
-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하와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일본의 막대한 재정투입, 사전 예방 차원의 IMF 긴급 자금 지원 제도를 설립키로 한 G7 합의 등을 확인하였음
- 국제 단기자본 이동 규제에 대한 이견도 팽배하였음. 개도국들을 조기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고 한 반면, 선진국들은 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움

- (경기 부양책)

- 아시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써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금리를 동반인하하고 재정을 확대,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음
- 또 IMF의 구제금융 재원을 900억 달러로 늘리고 일본의 300억 달러 신규차관을 아시아 각국에 적절히 배분하는 문제도 차후 논의될 예정임
- 이미 APEC 전문가 위원회는 10월말, 아시아 공동 회생 프로그램(CARP)을議長國인 말레이시아에 제출한 바 있는데, 이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이 금리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으로 99년도 성장률을 4%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임
- 주요 선진경제 국가들은 강력한 국내 수요촉진 정책을 시행하고,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신중하고 성장 지향적인 거시 경제 정책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함으로써 위기 해결에 노력한다는 합의에 도달함

- (기타 의제)

- 이밖에 전자상거래 및 관세부과, 회원국간 인적자원 개발문제, 과학기술 교류 문제, APEC 경제정상회담, 밀레니엄 버그 공동대처 등도 논의됨

□ 시사점

○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차 표출 등 APEC의 한계 노정

- 미국과 캐나다는 2020년까지 역내 자유무역을 목표로 한 APEC 설립취지에 따라 모든 부문의 무관세 자유무역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에 옮길 것을 주장
- 그러나 아시아 각국은 아직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한 만큼 자국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속도에 맞추어 관세를 철폐하자는 입장임
- 특히 2005년까지 역내 자유무역을 보장하기로 되어 있는 임수산물의 경우 일본이 지난 6일 당분간 관세철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여서 미국과 첨예한 논쟁이 예상됨
- 이밖에도 환경·에너지·의료제품·통신기기 등의 관세철폐 문제는 아직까지 실무자들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

○ 투기성 단기자금 (헤지펀드)에 대한 대책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

- 말레이시아와 홍콩은 이미 헤지펀드에 대한 정보공개와 투기활동 감시 등 규제를 하고 나섰고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도 동조하였음
-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는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인위적으로 막을 경우 금융 유동성을 경직시켜 경제위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섬

○ 전자상거래 관세부과 문제도 무관세를 주장하는 미국 및 캐나다의 입장과 당분간 관세부과를 주장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의견이 엇갈려 있음

-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규범 마련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를 희망하는 선진국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개도국간 기본입장에 차이가 존재함

(양 두 용 yangdy@hri.co.kr ☎724-4057, 양 성 수 yangs@hri.co.kr ☎724-4017)